

1. 개요

- 일시 및 장소: 2019. 11. 20(수). 16:00~18:00, 농특위
- 참석인원: 총 18명(분과위원 11명, 그 외 7명)
 - (분과위) 황수철 분과위원장, 강정현 위원, 김현용 위원, 박주영 위원, 배재수 위원, 성주인 위원, 안성민 위원, 유정규 위원, 정민철 위원, 최무열 위원, 황영모 위원 11명(총 20명 중)
 - (농특위) 양준일 위원, (농식품부) 김철 과장
 - (사무국) 농어촌정책팀장 등 5명
- 주요 내용: 논의의제 검토·협의, 제3차 본회의 상정안건 심의
 - 【논의】 농식품부의 ‘농촌협약제도 추진계획(안)’ 검토 및 협의
 - 【안전보고 및 논의】
 - ① (농촌정책혁신)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
 - ② (농촌사회혁신)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
 - ③ (산림TF)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

2.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

① 농식품부 ‘농촌협약제도 추진계획(안) 보고 및 논의

<<주요 내용>>

- 농촌지역개발사업 개편방향
 - 중앙은 핵심 정책어젠다 발굴·제시, 지역은 농발계획 등 종합사업계획수립
- 농촌협약 목적, 협약의 전제조건 및 기본내용, 협약 추진절차
- 농촌협약 도입계획
 - 2020년 시범도입(시군 9개소, 최대300억+α, '21년 협약체결, '22~'26년 시행), 2021년 '2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전면도입

□ 농촌공간계획전략과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관한 질문과 제안

- 둘 간의 관계,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. 협약실행단위가 시군 농촌인데 사회적 경제방식의 365 생활권 대응가능한지(황영모 위원)
- ☞ 3개 생활권 분석 후 서비스 재편, 20년 장기플랜에는 전체적인 생활권 단위를, 5년 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포함(김철 과장)
- 공간계획제도와 연계시 사업지원 이외 ‘자원보전, 주민협정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(성주인 위원)
- ☞ 농촌자원보전, 주민협정 등은 공간계획 도입 시 포함하겠음(김철 과장)
-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타부처의 다양한 사업 연계(박주영 위원)
- 협약기간 중 단체장 바뀔 경우 지속성 차원의 대안 필요, 전국 농어촌 시군을 도시근교, 중간, 원격으로 분류 후 제시(유정규 위원)
- 지자체의 정책개발 능력 스스로 확보 유도, 시군단위 시범모델 개발은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강조 필요(정민철 위원)
- ☞ 공간계획 도입 시 본격 포함 예정. 계속 고려 중(김철 과장)

□ 기존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참여 여부(황영모 위원)

- ☞ 기존의 중간지원조직 최대한 활용, 참여시키겠음(김철 과장)

□ 9개소 선정 후 시군 전략·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, 대상지 선정 전에 계획과 재원조달의 평가 선행 필요(김현용 위원)

- ☞ 전략·활성화계획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선정 후 수립. 다만 선정단계에서 계획안, 참여의지, 중간지원조직 구성여부 등 고려(김철 과장)

→ '20년 초 농어촌분과 의제로 다루기로 함

- 어젠다 세팅시 지역의 정책여건 고려, 공간·경제·사회측면을 고려한 큰 그림, 지자체 역량(중간지원조직 활용 등), 계획 통폐합 및 농발계획의 실효성 확보, 성과평가(강력한 페널티, 사업단계별 예산배분), 타 부처와의 관계 등 고려

② 안건: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

- ‘통합적 추진체계’ 의미에 대한 혼선(유정규 위원, 최무열 위원, 황수철 분과위원장),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되 의미를 추가 기입(유정규 위원)
- ‘주요의제’와 ‘세부과제’ 제목을 명확하게 표현(김현용 위원)
-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통합화, 지역사정에 따라 자율적 유도(성주인 위원),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중앙부처 이행추가 필요(정민철 위원)

→ 본 위원회 의결안건 상정, 내용은 위원의 의견을 받아 수정·보완

③ 안건: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

- 기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, 정부정책에 대한 한계와 차별점 등을 담은 문제제기 명확히 제시(황수철 분과위원장, 황영모 위원)
 - 농어촌 지역에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가, 왜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인가, 누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이끄는가, 그 조직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되짚어 볼 필요(황수철 분과위원장, 박주영 위원)
 - 농어촌형 사회적 경제 조직에 영농조합법인 포함시켜야 함(황영모 위원)
 - 2017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부대책 발표, 현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리해 반영(황수철 분과위원장)

→ 본 위원회 토론안건으로 상정, 자료 보완해 내년에 안건화

④ 안건: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

- 농특위 차원에서 임도, 산림 미이용 바이오매스,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, 수단으로써 세계 등이 검토대상임(황수철 분과위원장)
-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을 위해서는 산림바이오매스, 신재생 에너지 등의 추가적인 내용 보완 필요(김현용 위원, 유정규 위원)

- 직불금의 경우 공익적인 추가 기여활동이 있을 때 지급하는데 산소유주에게 주는 것은 무리임(유정규 위원)
- 지역에서는 산촌-농촌의 경계가 모호, 산림바이오매스 등 로컬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고리 필요(정민철 위원)

→ 자료 보완하여 본 위원회 의결안건으로 상정

3. 향후 계획

- 안건 수정·보완하여 농특위 운영위원회(11.27), 본위원회(12.3) 상정
 - 의결안건: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,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
 - 토론안건: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
 - 2020년 자료 보완하여 안건 준비
- 분과위 논의 사항이 연구에 반영되도록 조치(용역기관 전달)
- 농어촌 분과위원회 워크숍 개최(연구최종보고회 겸함, 12.7)
 - 2019년도 농어촌 분과 활동 점검 및 2020년도 계획 논의